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서류 대폭 간소화

중소기업들이 신청서 한 장만으로 정부에 정책자금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기우)은 최근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제도를 통합, 집행창구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일원화한 '중소기업 지원체제 효율화 방안'에 따라 정책자금 신청서류 간소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신청하려면 상담을 통해 복잡한 사업 구분을 따져 해당 사업의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올해부터는 한 종류의 신청서만 작성하면 공단 지역본부 담당 직원이 가장 적합한 자금을 골라 신청해준다.

첨부하는 서류도 크게 줄어든다. 현재의 경우 지원사업에 따라 많게는 16종류의 서류를 일일이 해당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토록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공단이 직접 받거나 현장 조사 과정에서 확인할 방침이다.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2010년부터 모든 법인사업자들은 거래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국세청에 실시간 전송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보다 효율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적발할 수 있게 돼 탈세행위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 입장에서도 그동안 세금계산서를 보관·신고하는데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1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을 시작하고 10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 뒤 2010년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2010년 법인사업자부터 의무화한 뒤 단계적으로 개인사업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해 합계표 제출 및 보관의무를 면제하고 발행 건당 100원의 발행세액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가 완전 정착된 후에는 면세사업자가 법정영수증으로 교부하는 계산서에 대해서도 전자계산서 발행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중기 절반정도 납품대금 현금으로 못받아

최근 불황과 신용경색으로 가뜩이나 운영자금을 구하기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등에 납품하고도 대금을 절반 가까이 어음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4분기 판매대금 가운데 어음결제 비중은 45.1%로 집계됐다.

이는 제품을 생산, 납품한 뒤 현금·신용장(L/C)·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현금성 결제가 이뤄지는 비율이 절반을 약간 웃도는 54.9% 뿐이라는 얘기다.

이 같은 어음결제 비율은 2002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기존 최고기록인 2004년 1분기의 43.7%를 1.4%포인트 웃도는 것이다. 1년 전인 2007년 4분기(36.4%)와 비교하면 8.7%포인트나 높아졌다.

특히 대기업에 납품하는 협력중소제조업체들의 어음결제 비율은 46.0%로 전체 평균보다도 높았다. 직전 분기인 작년 3분기(38.4%)에 비해 7.6%포인트나 큰 폭으로 뛰었고, 2007년 4분기(39.3%)보다도 6.7%포인트 더 올랐다.

중소기업이 손에 쥔 어음으로 실제 판매대금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28.1일로 조사됐다. 무려 4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작년 3분기의 127.5일보다 약간 더 늘었다. 대기업에 납품 업체들의 어음 회수기일은 평균 119.7일로, 역시 직전분기의 118.4일에 비해 하루 정도 많아졌다.

영세업체 조달시장 참여 확대

앞으로 영세제조업체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쉬워진다. 조달청(청장 장수만)은 입찰참가등록에 필요한 제조업체의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완화해 영세제조업체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췄다고 최근 밝혔다.

조달청은 2007년 10월부터 제조업체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신청할 경우 직접 생산공장을 방문, 품명별 실태조사 기준표를 바탕으로 조사 후 직접생산확인 등록을 허용하는 직접생산확인제도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업종별로 생산시설·생산인력 등의 기준에 차이가 있어 일부 업체의 경우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생산시설·인력 미비로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나치게 엄격한 생산시설·인력기준을 완화하고 업종별로 상이한 기준조건을 형평성에 맞게 조정해 영세제조업체의 조달시장 장벽을 없앴다.

주요 조정내용을 보면 상이한 생산인력 요구조건(업종별로 1~10인 이상)은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1인 이상으로 통일하고 생산인력의 국가기술자격 의무보유조건을 폐지했다.

또한 영세제조업체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생산공정 기준을 완화하고 일정수준 이상(198.348㎡)이던 생산공장 요구조건도 폐지했다.

경기악화에 중소기업 워크아웃 급증

경영난에 처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3분기 은행들이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한 중소기업은 386개로 전 분기보다 57.6% 급증했다고 밝혔다.

신규 워크아웃 기업은 1분기 126개, 2분기 245개에 이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경기가 악화하고 있고 은행들이 거래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강화하고 있고 워크아웃 기업은 계속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도 등으로 워크아웃을 중단한 기업은 2분기 53개에서 3분기 75개로 늘어난 반면 경영 정상화로 워크아웃을 졸업한 기업은 272개에서 159개로 급감했다. 9월 말 현재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기업은 1438개이다. 3분기 중에 은행들이 워크아웃 기업에 지원한 자금은 886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원 유형은 만기 연장이 672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규 여신(1804억원), 이자 감면(54억원) 등의 순이었다.

지원액 가운데 만기 연장 비중은 상반기 86.4%에서 3분기 75.9%로 줄었으며 대신 신규 여신은 11.2%에서 20.4%로 증가했다.

조달물품 국가공인기관 품질검사 실시

앞으로 조달청에서 공급하는 조달물품은 조달청이 지정한 국가공인검사기관에서 전문적인 품질검사를 받게 된다. 조달청(청장 장수만)은 조달물품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공인검사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조달물품 전문기관 검사제도'를 도입해 시행에 들어갔다.

조달청은 전문검사 인력과 장비부족 등 물품검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문기관 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콘크리트 블록, 펌프, 금속문 등 15개 품명부터 적용해 점차 검사 품명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동안 조달물품은 대부분 수요기관에서 직접 물품검사를 해 왔으며, 가구류 · 섬유류 등 일부 물품만 조달청에서 검사해 왔다.

수요기관에서 직접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전문검사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검사에 어려움이 있고, 검사과정 및 결과에 대해 수요기관과 납품업체간 끊임없는 분쟁이 발생했다. 또한 실질적인 검사없이 업체에서 제출하는 검사자료(시험성적서 등)로 검사를 갈음하는 경우가 많아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납품 후 성능미달, 하자 발생 등의 원인이 됐다.

이에 조달청은 2008년 1월 수요기관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조달물품 검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응답자의 53%가 조달물품 품질에 불만을 제기했고, 전체 응답자의 64%가 조달물품 검사를 조달청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100만㎡ 미만 산업단지 조성 용이

앞으로 100만㎡ 미만의 소규모 산업단지 건립이 쉬워진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취수지점으로부터 7km만 떨어지면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되고 면적이 100만㎡ 미만인 산업단지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소규모 산업단지의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의 개별공장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해 2008년 1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폐수를 발생하지 않는 공장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입지기준을 완화했다. 현재는 광역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20km, 지방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10km,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취수장은 취수지점으로부터 15km 이내에는 짓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률적으로 취수지점으로부터 7km만 떨어지면 입지가 가능해진다. 폐수를 발생하는 공장은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모든 산업단지에서 공동주택용지의 25% 이상을 국민임대주택용지로 확보하도록 한 규정을 개선해 면적이 100만㎡ 이상인 산업단지에만 적용토록 축소했다. 의무비율도 지정권자가 해당지역의 주거수요 등을 감안해 1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산업단지의 녹지율이 과도하게 설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녹지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지정권자, 환경평가 협의기관의 장, 전문가 등으로 실사단을 구성해 협의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자연환경보전지역, 수변구역, 임업진흥권역 등 일정지역에 대해 민간기업이 산업단지 지정요청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지역에 상관없이 지정 신청 건별로 검토하도록 했다.

중소기업계, 최저임금제도 개선 촉구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통해 고령자 등의 일자리 확대와 고용유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벤처산업협회 등 13개 주요 중소기업단체들은 최근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에게 성명서를 전달했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이 최근 10년간 매년 평균 11.3%로 인상됨에 따라 이미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높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이들의 일터가 사라지고 빈곤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일감부족과 판매부진 등으로 가동률이 60%대로 떨어진 중소기업들이 기존 근로자 해고대신 임금동결, 근로시간 단축, 휴가부여 등과 함께 최저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중소기업계는 성명서에서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일자리창출과 고용확대를 위해 ▲고령자 일자리 제공을 위해 고령자의 최저임금 조정 ▲지방중소기업의 고용확대 차원에서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선 ▲외국인 근로자 숙식비의 최저임금 공제한도 설정 ▲의사소통력 등 생산성이 낮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적용기간의 합리적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침체 속 근로자 애사심 높아져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속에 우리 근로자의 애사심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제조업 근로자 1030명을 대상으로 '제조업 근로자 의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78.3%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고 해 4년 전 같은 조사의 결과(39.5%) 보다 2배나 늘어났다고 최근 밝혔다.

대기업(82.6%)이나 중소기업(73.2%), 사무직(82.1%)이나 생산직(76.6%)에 관계없이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높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의 경제위기와 실업 공포가 직장에 대한 근로자의 의식을 크게 바꿔 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근로에 대한 가치관도 크게 변화했다. 4년 전 조사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잘 살 수 없다'는 답변이 66.0%를 차지했으나 이번 조사에선 '열심히 일하면잘 살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77.3%에 달했다.

근로자의 근로의욕도 매우 높았다. 응답자의 79.5%가 '생계가 해결돼도 계속 일할 것'이라고 밝혔고, 근로희망 연령과 관련해서는 52.0%가 '일할 수 있을 때까지', 8.5%가 '70세까지 일하겠다'고 답했다. 또 근로자 10명 중 8명 이상은 '현재의 경제상황이 위기'라는데 동의했고 '생활 수준은 3~4년 전보다 나빠졌다'는 반응이 58.0%를 차지했다.

중소기업 돕는 은행 총액한도대출 우대

기업이 발행한 약속어음과 환어음 등 상업어음도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등의 각종 담보로 적극적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결정했다.

한은은 발표문에서 대출제도의 유연한 활용과 금융기관의 담보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증권의 담보활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담보가액 인정비율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은행들이 기업에 대출하면서 받은 약속어음 · 환어음 등 신용증권도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담보로 많이 사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한은의 대출제도로는 총액한도대출, 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 등이 있으며 경제위기가 더욱 심각해질 때는 긴급대출이 도입될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도 신용증권을 담보로 설정할 수 있으나 주로 안정성이 높은 국공채를 담보로 잡고 총액한도대출 등을 해주고 있다면서 약속어음이나 환어음 등 신용증권을 담보로 적극 받아들이면 은행들의 자금 확보가 훨씬 쉬워진다고 말했다.

중기청, 창업지원 전담기관 출범

창업 시책개발부터 창업교육, 예비 창업자의 기술창업 지원 등을 수행하는 창업지원 전담기관이 출범했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최근 KAIST 신기술창업관에서 (사)창업진흥원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개원한 창업진흥원은 기존 (사)한국창업보육협회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창업지원 시책개발과 사업집행 등을 전담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출범했다.

창업진흥원은 2부(기획조정부, 창업진흥부), 1실(정책연구실), 3팀(창업기반지원팀, 창업진흥지원팀, 기술창업지원팀) 등 22명의 인원으로 구성됐으며 창업정책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원이 박사급 인력인 정책연구실이 신설됐다. 또한 기술창업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신기술창업지원팀이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기술창업 지원의 허브기관 역할을 수행할 기반을 갖추게 됐다.

'수도권 공장신설 전면 허용' 개정안 의결

정부는 1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경기 활성화 및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수도권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 신 · 증설을 전면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인구 및 산업의 이전이 필요한 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 인천 등의 과밀억제지역이나, 이 지역으로부터 인구 및 산업시설이 유입되는 경기도의 성장관리지역에 있는 89개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의 공장 신 · 증설을 허용하고, 나머지 지역의 경우 기존 공장의 증설 가능 범위를 확대했다.

정부는 경제적 가치가 크고 수요가 많은 대역의 주파수는 경매를 통해 할당하는 이른바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파법 개정안도 의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 외부감사 대상 축소

중소기업계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외부감사 의무적용 대상 기준이 올 1월 1일부터 축소됐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전광우)가 지난 9월 입법예고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달 6일 공포하고 올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기준이 현행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로 인해 약 4천여개의 중소기업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회사당 1천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감사수수료가 절감돼 전체적으로 400억~500억원의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외감법 적용대상 기준은 지난 1998년에 마련된 것으로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해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이 같은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작년 관련 법안의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6월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평균 외부감사 비용은 약 1610만원으로 나타났고, 적용대상을 현행 자산규모 7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다. 이럴 경우 약 9600개 이상의 비상장 중소기업이 약 1500여억원의 비용을 절감해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중소기업계는 비록 당초 요구안 보다 반절 정도 밖에 반영이 안됐지만, 비용절감을 통해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여력이 생겼고, 이를 통해 일자리 유지와 창출, 우리경제 활력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KISTI, 중소벤처에 고가의 해외시장 정보보고서 제공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원장 박영서)이 중소벤처기업에게 고가의 해외시장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제공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나섰다. KISTI에 따르면 Frost&Sullivan, Datamonitor, Gale 등 고가의 해외시장 조사분석 정보보고서를 100개의 중소벤처기업에게 제공하는 해외시장 정보 제공사업을 실시한다.

해외시장 정보 보고서는 신규사업 기획시 시장성 파악과 신제품 개발 기획시 경쟁사 파악 및 경쟁사 기술력 분석, 시장규모 및 경쟁사 가격분석, 개발 진행중인 제품의 시장변화 등을 모니터링 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구매비용이 200만~600만원의 고가이고 특정기술 및 제품에 대한 심층 보고서는 4000만원을 넘어 중소벤처기업들이 구매하기엔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를 위해 KISTI 올해 시범 사업으로 수도권 20개 기업, 충청권 20개 기업, 대구 · 경북 20개 기업, 부산 · 경남 20개 기업, 광주 · 호남 20개 기업 등 모두 100개 기업에게 해외시장 정보 보고서를 제공한다.

김찬호 KISTI 충청지원장은 "이 보고서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들이 기술 도입기부터 성숙기까지 단계별로 시장이나 제품에 대한 해외시장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해 기술개발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장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중기청·중기진흥공단 성공사례집 발간

중기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사업전환을 통해 제2의 도약에 성공한 26개 기업들의 성공스토리 '이유있는 변신, 이유있는 성공 2집'을 1월 14일 발간했다. '이유있는 변신, 이유있는 성공 2집'은 그동안 '사업전환사업'에 참여한 500여 기업 가운데 사업전환에 성공한 26개 중소기업들의 사업전환 전략과 경험담 등을 엮었다.

이번 성공사례집은 사업전환 아이디어 도출 및 전략 수립에서부터 지원정책 활용, 위기극복 방법에 이르기까지의 '사업전환 성공비법'은 물론 중진공 전담코디네이터의 후일 평도 곁들임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사업전환을 통한 제2의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다.

책자가 필요한 중소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연구기관 등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또는 사업전환지원센터 홈페이지(www.kerc.or.kr)에서 다운로드받거나, 사업전환지원센터(02-769-6804~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중기청은 지난 2006년 시작한 사업전환 지원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낳는 등 정책효과가 높은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기존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 건설업, 광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으로 개방한다. 또한 자금 융자한도도 업체당 과거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중기청 자금 가운데 가장 낮은 정책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국선이사제 도입

운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정상화를 돕기 위한 국선 이사제(가칭)가 도입된다. 정부 관계자는 1월 12일 "협동조합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상근임원(이사, 전무)의 역할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해 상근임원의 인건비를 정부가 보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선이사제는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이도록 하는 국선변호인제와 비슷한 개념. 정부가 파견하는 관선이사제와는 다른 독립적, 공익적 개념이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에 400여개 협동조합에 대·중소기업, 유관업종 퇴직자 400명 가량이 협동조합 상근이사로 채용될 전망이어서 위기에 처한 협동조합 운영 개선뿐 아니라 퇴직인력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상근임원 인건비를 정부가 50%, 민간인 조합이 50%를 부담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하면서 "관련 예산 확보와 법률 개정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이 현재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협동조합 400곳에 1명씩 총 400명의 임원을 선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퇴직자, 유관업종의 전문가, 경영지도사 자격증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국선 이사'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인력풀로 구성, 조합 임원의 역할과 업무수칙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합에서는 인력풀을 통해 각 조합이 필요한 임원을 선정해 면접 등을 거친 뒤 이사회 의결과 정부 승인을 받아 국선 이사를 채용한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협동조합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R&D) 지원자금 중 연구기술과제에 협동조합의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특허청, 중기지원사업 현장중심 개편

특허청이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고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첨단부품·소재산업 지식재산(IP) R&D 전략지원과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시제품 제작지원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개편하고 맞춤형 패키지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우수 특허기술의 개발과 공급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올해 지식재산 창출 강화·활용 예산을 지난해 보다 136% 증액된 1424억원을 집행한다.

우선 첨단 부품·소재분야 중소기업의 경우 R&D 단계별 맞춤형 IP 획득 전략 수립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기업 경영에 맞는 IP전략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최대 9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현장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강사를 직접 파견해 교육하는 중소기업 지식재산리더 양성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개인발명가 및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특허를 지원하는 우수특허 사업화 지원사업과 특허, 브랜드, 디자인 경영 등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사업을 연계,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 계약절차 줄여 기업 자금난 지원

서울시는 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을 위해 이뤄지는 관공서·업체와의 계약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95일까지 걸리던 소요기간을 38일까지, 최대 57일까지 단축, 사업 조기발주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신년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90% 이상을 상반기에 발주하고 '클로징(Closing) 10 개념'을 도입해 사업을 가능한 10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밝힌 데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10억원 이상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각종 계약절차에 대한 총 소요기간이 종전 95일에서 38일로 단축돼 약 57일 이상 조기에 대가를 지급, 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사업발주 전 원가분석을 통해 사업의 적정사업비를 산출하는 계약 원가심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절반 가량 단축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에 하도록 돼 있는 공고 기간을 법정한도 최소기간인 5일(협상 계약의 경우 10일)로 단축해 긴급 시행한다.

또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을 심사하는 적격심사기간과 계약이행 완료 후 확인 절차인 준공검사기간 등의 법적 소요기간도 절반으로 단축해 계약업체에게 대금이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지원한다.